

걸림돌<sup>☹</sup>은 빼고  
디딤돌<sup>☺</sup>은 놓고

생활 속 규제개혁

# 규제개혁이란?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함을 만나게 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감수하는 불편함 중에는 제도적인 규제가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규제(規制)'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요소지만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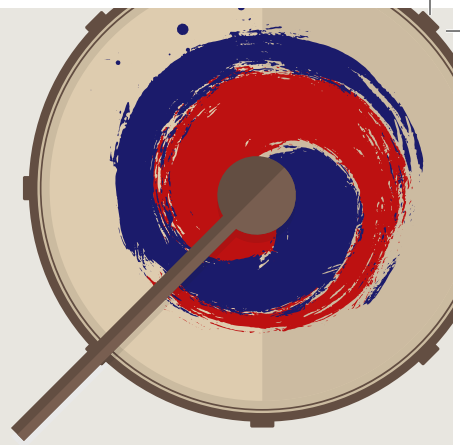
그동안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정체되어 있는 규제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감이 없도록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시를 뽑아내는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뽑고 나서는 고통보다 불편함이 해소된 기쁨이 더할 수 있기에, 생활 속 꼬여 있는 규제의 실타래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한 사례 중 생활 속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을 모아 발간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규제개혁이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규제개혁신문고



파사현정(破邪顯正)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물리치고 도리를 바로 세운다는 뜻의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파사현정의 가르침을 본받아 지난 2014년 3월 20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규제개혁신문고**가 탄생했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무려 **3,900여 건이 넘는 현장 규제를 해소**해왔으며,

이 가운데 70%는 국민생활과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생활환경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하나라도 더 덜어낼 수 있도록 작은 규제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 Contents

## 1 국민생활 불편 해소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 불편은 덜고 생업에는 힘을 보태기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01. 경찰민원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 (경찰청, 2016년 1월) .....	8
02.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경찰청, 2015년 3월) .....	10
0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입 후에도 사용 가능 (환경부, 2015년 8월) .....	12
04.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목적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 (국토교통부, 2014년 12월) .....	14
05.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	16
06. 한 지붕 두 가게 (Shop-in-Shop)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2월) .....	18
07.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	20
0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배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10월) .....	22
09. 수성못 야간 유람선 운행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2월) .....	24

## 2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실패의 부담을 떨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작은 기업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0.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고용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6월) .....	28
11. 1인 창조기업 업종 포괄적 허용 (중소기업청, 2015년 2월) .....	30
12.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세청, 2015년 9월) .....	32
13. 시동 걸린 카셰어링 서비스 (경찰청, 2017년 하반기) .....	34
14. 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 허용 (해양수산부, 2016년 7월) .....	36
15.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허용 (고용노동부, 2014년 9월 / 보건복지부, 2015년 4월) .....	38
16.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 (법무부, 2016년 5월) .....	40
17. 경품규제 100%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7월) .....	42
18.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 (국토교통부, 2016년 7월) .....	44

## 3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걸림들은 빼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탄탄한 디딤들을 놓았습니다.

19. 의료용 3D 프린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2월) .....	48
20.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2016년 7월) .....	50
21.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전국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2016년 11월) .....	52
22. 규제완화를 통한 재활용 신기술 사용 (환경부, 2016년 6월) .....	54
23. 농업용 소형 드론 용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6월) .....	56
24. 마리나 선박 활용한 창업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2015년 7월) .....	58
25. 친환경 이동수단 - 삼륜형 이륜차 제작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17년 1월) .....	60
26. IoT 상용화 위한 주파수 출력 기준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5월) .....	62

2016년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규제개혁 체감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모전 당선작(요약)입니다.

## 수박농사꾼의 환희 대상

이윤재

**“세상에 누가 수박의 T자 꼭지가 신선하며 달다고 소문을 낸 건지...”**

해마다 수확철이 다가오면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는다.

소비자들은 수박을 살 때 T자형 꼭지를 보고 신선함과 당도를 판단하곤 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수박을 수확할 때 T자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품을 더욱 들인다. 흔히들 한 번만 가위질할 것을 두 번, 세 번 해야 하고, 수박을 싣고 내릴 때 더욱 신중을 기한다. 혹여 유통과정 중에 T자형 꼭지가 떨어지더라도 하면, 수박 값이 반값으로 떨어져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꼭지를 보존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 농민들의 불만도 점점 쌓여갔다. 이에 정부는 T자 꼭지를 없애기로 했다.

농민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규제개혁 이후 수확하는 농민들의 일손은 보다 가벼워졌다. 꼭지에 신경을 안 쓰게 되니 비용도 절감되고 손해를 보지 않아 좋았다.

**“여보, 잔돈 챙겼어요?”**

수확한 수박을 한 가득 트럭에 싣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늘 나에게 묻는다. 혹여 잔돈을 준비하지 못한 날이면, 나는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에게 미안해하며 큰 돈을 낸다. 뒤에 줄지어 기다리는 차들 때문에 받은 거스름돈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용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되니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니다.

**“이거 어디에 주차를 해야 할지...난감하네.”**

트럭을 이용해 가게에 과일을 배달할 때면, 늘 고민이 많다. 길가에 주·정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물건 배달이 한창인 오전 10시경에는 영락없이 단속 요원들이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다. 수박 몇 덩이 배달해주려다가 3만원짜리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날이면 하루 장사를 공친 것과 같다. 불법으로 트럭을 주·정차 시키는 것이 위법이기는 하나, 상점들이 밀집된 지역에 배달을 할 때에는 길가에 정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통시장 주변도로와 상가 밀집지역은 물론 식당 주변에도 점심시간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소형화물과 택배차량은 15분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런 규제개혁은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일이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개선해 나가는 것, 국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는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1 국민생활 불편 해소

국민들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생활 불편은 덜고 생업에는 힘을 보태기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01. 경찰민원 one-stop 처리시스템 구축 (경찰청, 2016년 1월) .....	8
02.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규제 완화 (경찰청, 2015년 3월) .....	10
03.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전입 후에도 사용 가능 (환경부, 2015년 8월) .....	12
04. 고속도로 통행료, 최종 목적지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 (국토교통부, 2014년 12월) .....	14
05.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 시 변경 허용 (행정자치부, 2017년 5월) .....	16
06. 한 지붕 두 가게 (Shop-in-Shop)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2월) .....	18
07.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 (국민안전처, 2014년 4월) .....	20
08.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배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10월) .....	22
09. 수성못 야간 유람선 운행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2월) .....	24

# 01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번거롭게 일일이 경찰서를 방문해야  
처리가 되나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러 가고, 찾으러  
또 가고 너무 불편해요.”



 간단한 신고도 꼭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 그동안 경찰청은 국민 중심의 경찰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찰 업무 특성상 고소·고발·진정과 같은 열악한 민원을 처리하는 힘든 여건이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만족률을 꾸준히 상승시켜왔다. 하지만 전국의 종합민원실만으로는 민원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직장인 이미선 씨는 얼마 전 가족여행 중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 재발급을 위해 서류 신청을 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가까운 경찰서도 30분 거리인지라 잠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업무 특성상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그는 결국 회사에 휴가를 내고 처리해야 했다.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갈 때에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가야 했다.

운전면허 갱신, 분실신고 접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등 일상생활 속에서 경찰서에 방문할 일이 빈번히 있다. 하지만 이씨처럼 경찰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시간상·비용상으로 큰 불편이었다.





**경찰민원 One stop 처리, 이제 집에서 편하고 쉽게!**

● 경찰청은 지난 2014년부터 총 24억 원을 들여 ‘경찰민원포털시스템(minwon.police.go.kr)’ 구축을 위한 2개년 사업을 진행했다. 인터넷을 통해 윈스톱 민원서비스를 구축한 경찰민원포털 시스템은 의무경찰 지원과 범죄 신고, 제보 등의 민원과 운전 경력증명서, 범죄 경력증명서, 운전면허갱신 재발급, 분실신고 등 총 47종의 법정 민원을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운전면허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실생활 관련 민원의 접속 창구를 일원화시켰다. 국민 수요가 많은 다양한 경찰 관련 정보(운전면허 관련 정보, 범칙금·과태료 정보) 등을 Q&A 형식으로 제공하고 ‘인터넷 사전 방문예약 서비스’ 등의 국민 편의 기능도 제공했다. 경찰청은 연간 경찰민원 신청건수 900여만 건 중 약 50%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 450만 명의 방문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1,450여억 원의 사회적비용(교통비, 인건비) 등이 절감돼 민원행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이렇게 달라졌어요!</b> <span style="float: right;">경찰청 ☎ 02-3150-0460</span>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부분의 민원을 경찰관서를 방문해 처리 - 95건 중 17종만 온라인 처리(17.9%)</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문처리 및 분산되어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 95건 중 47종 온라인 처리 확대(49.5%) (2016년 1월)</li> </ul>

## 02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싶은데,  
주차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부족한 주차공간, 이용고객들은 불편합니다

- 서울 남대문시장은 가성비 좋은 의류와 액세서리로 외국인들에게 소문난 국내 전통시장 중 하나다. 일평균 약 40만 명의 고객이 찾고 있고, 이들 중 외국인은 1만여 명에 이른다. 전통시장은 특색 있는 상품들과 부담 없는 가격을 바탕으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매력적인 관광명소로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부도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주차장이나 쇼핑카트 등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조금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가격차는 일종의 편익비용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주부 성경희 씨는 근처에 있는 새마을시장을 자주 이용한다. 하지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대형마트를 이용한다. 많은 양의 짐을 들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쇼핑카트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국 1,398곳의 전통시장 중 575곳은 주차공간을 한 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였다.

“이면도로 주·정차가 가능해져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데  
불편함이 줄었어요.”



**주차문제를 해결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올리고,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줄였습니다**

-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설, 추석 명절 시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 식당·음식점 밀집 지역 주차와 소형 화물·택배차량의 단시간(15분 내외) 주차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주말과 공휴일, 공원·체육시설 주변 주차와 고궁·박물관 주변 외국인 관광객 수송차량 주차도 허용됐다. 경찰청은 지역별로 허용 구간을 선정해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 보조 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장 자체 관리요원도 배치해 수월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차 문제 해소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경찰청 ☎ 02-3150-0616

**개선 전**

-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전통시장 이용객, 소상공인 등 생계형 차량 불편 가중

**개선 후**

- 교통안전 유지 범위 내에서 주차 허용 (2015년 3월)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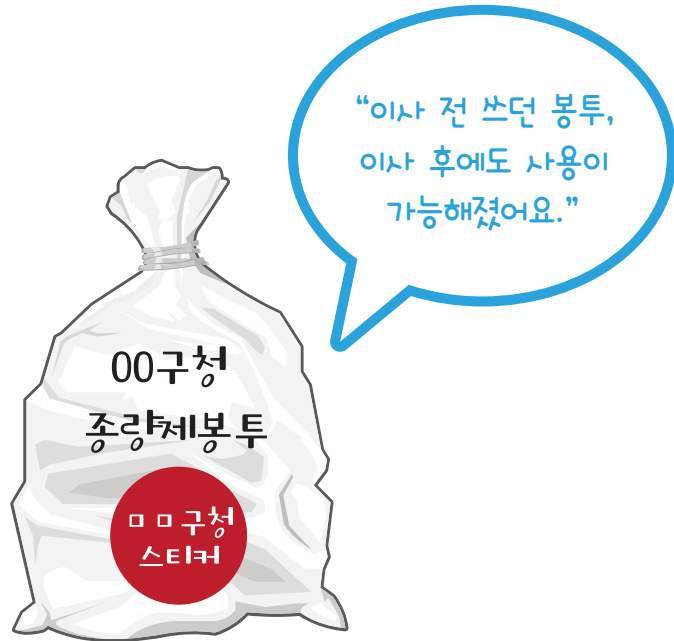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사용할 수 없나요?

“쓰던 봉투가 남았는데도,  
이사가면 다시 사야 하니  
낭비인 것 같아요.”



### 🔍 지자체별로 다른 정책, 타 지역 쓰레기 봉투는 사용할 수 없다?

- 1995년 1월 1일, 전국에서 일제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다. 종량제 도입으로 국민들은 쓰레기 배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게 됐고, 기업은 환경친화적 경영을 시작했다. 지자체 역시 봉투판매 수입을 통해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20년간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던 직장인 김희원 씨는 얼마 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이사짐 포장을 마친 김 씨는 텅 빈 부엌 한편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쓰레기 봉투 때문에 고민했다. 이사 가기 전 미리 샀던 20리터짜리 봉투 10장을 남양주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남은 쓰레기 봉투들은 새로 이사 오는 분에게 모두 드렸다. 현재 쓰레기 종량제는 각 시·군·구 등 지자체별로 사용되는 봉투와 처리 방식, 심지어 봉투 값도 다르다. 만약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을 하거나, 기타 이유로 타 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새로 구입해야 한다. 이전 지역에서 썼던 쓰레기 봉투가 남았음에도 새로 사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와 번거로움은 국민들에게 큰 불편이었다.



**인증마크 부착, 봉투 교환으로 비용부담과 불편 없이 이용 가능!**

- 환경부는 쓰레기 봉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15년 8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의 규정을 개선했다.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해당 지역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외에도 1~2인 가구와 같은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해 3리터, 5리터의 소형 봉투를 제작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환경부 ☎ 044-201-7360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종량제 봉투를 해당 지자체 종량제 봉투로 교환, 배출이 가능한 스티커 등 인증마크 부착하여 사용 가능</li> <li>-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2015년 8월)</li> <li>※ 해당 지자체 조례개정 및 확대 시행 중 (2016년 6월 기준 228개 지자체 중 81개(36%) 반영)</li> </ul>	

# 04

## 고속도로 통행료, 한 번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안 되나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요금 정산만 3번,  
그것도 현금으로만 가능하니  
너무 불편해요.”



### 스마트한 교통환경, 하지만 신용카드는 안 된다?

● 1968년 경인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역사가 시작됐다. 고속도로가 도입된 지 반세기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점차 늘어났고, 더 많은 고속도로가 만들어졌다. 통행료 징수도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통행권 유인 발매에서 무인 자동통행권 등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07년 12월 20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고속도로 262개 영업소 593차로에 하이패스를 구축, 개통했다.

서울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성영호 씨는 일주일에 3번 이상 광주에 있는 본사로 출근한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그의 자가용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지만, 가끔 회사차를 이용할 때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 난감할 때가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 현금과 고속도로카드만 가능해 늘 현금을 소지해야 했다. 거스름돈을 주고받는 번거로움, 그리고 전자카드에 미리 현금을 충전해야 해 불편했다. 특히 그가 자주 다니는 길은 정차를 무려 4번, 요금 정산도 3번이나 해야 했다.



**● 중간정산 없이 원스톱으로 원하는 결제방식으로 한번에!**

● 성영호 씨처럼 운전자들의 불편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2014년 12월 30일부터 한 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직접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를 가능하게 했다.

2016년 11월 11일부터는 민자고속도로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 12곳(‘논산-천안’, ‘부산-대구’,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양양(춘천)’, ‘용인-서울’, ‘평택-화성’,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으로 확대 시행했다. 정부는 원톨링 시스템 시행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약 9,3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토교통부 ☎ 044-201-3896
<p><b>🏠 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속도로 통행료는 현금, 하이패스, 선불충전식 전자카드로만 납부 가능</li> </ul>	<p><b>⚙️ 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가능 (2014년 12월 시행)</li> <li>- 민자고속도로 12곳으로 확장(2016년 11월 시행)</li> </ul>	

# 05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후 스팸문자가 많아졌어요.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 대다수 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을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다. 1975년 첫 발급이 시작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 신고지 등 고유한 식별정보가 담긴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유일한 식별번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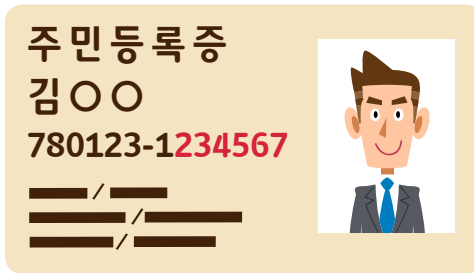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부여받는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인식표다.

한 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는 오류와 정정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할 수 없었다.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라도 바꾸기는 어렵다.

직장인 조상득(가명) 씨는 얼마 전부터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해 사용하고 있다. 중국 출장 중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조 씨의 이메일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접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까 조 씨는 늘 두렵기만 하다.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어요!”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전격 시행됩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7년 5월부터 성별표기 다음의 뒤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전격 시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한 국민에게 통지한다.

신청서 제출 시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유출로 인한 피해(또는 우려)’를 입증하는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침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행정자치부 ☎ 02-2100-3838

**개선 전**

-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 유출을 이유로 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불가

**개선 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주민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 「주민등록법」 (2016년 5월 개정, 2017년 5월 시행)

# 06

## 일석이조 쇼핀쇼(Shop-in-Shop), 우리나라에서는 창업할 수 없나요?



### 과도한 식품위생법 규제로 쇼핀쇼 복합매장 창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 외국에 나가보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며 당구를 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점포의 남는 공간에 다른 업종을 들여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이 같은 형태를 ‘쇼핀쇼(Shop-in-Shop)’이라고 한다. 경기불황 속 창업이 일반화된 요즘 저렴한 투자비로 수익 다각화를 노릴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들이 눈여겨보는 사업 아이템 중 하나다.

2014년 플로리스트인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싶던 ‘루즐리인더원’ 김지연 대표는 꽃과 커피를 함께 팔 수 있는 카페 창업을 결심한다. 임대받은 점포 두 곳의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2개의 사업자 등록으로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확장공사도 했다. 미용실 안 네일숍처럼 쉬운 창업을 기대했지만, 가게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다. 식품위생법상 고객에게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곳은 다른 업종과 칸막이로 완전히 분리해야 창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꼴이었다.



**식품접객업 특성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선택 적용**

● 중소기업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흡인숍 규제를 개선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완화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도 소상공인의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흡인숍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규제완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흡인숍을 운영하거나 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식품위생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흡인숍은 벽으로 사방을 막지 않아도 바닥에 줄이나 선으로 업장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해졌다.

자영업자 600만 명 시대, 매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을 앞세운 흡인숍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719-2016

개선 전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접객업 영업장은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접객업 특성에 따라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구획) 칸막이 · 커튼 등으로 구분 (구분) 선 · 줄 등으로 구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5년 12월)</li> </ul>

# 07

## 주유소에 더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나요?

“제한된 업종과 공간 때문에  
주유소 내 편의시설을 두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유소 1층만 일부 활용 가능하고, 업종도 면적도 모두 제한적

● 최근 주유업계는 업체 간 과열 경쟁과 잦은 유가변동으로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저유가가 지속되면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맞물려 수익이 악화되고, 고유가가 지속될 때에는 고객이 줄어 수익이 악화된다. 국내 주유소 수는 현재 약 1만 3,000개. 업계에서 적정 규모로 보는 7,000~8,000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1995년 거리제한 규제가 철폐되면서 주유소 수는 급증세를 타기 시작했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폐업 또는 휴업하는 곳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복 씨는 주유소 건물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임대하려고 한다.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임대를 하면 수익도 좋아질 뿐 아니라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유소 내 부대시설 입점은 제약이 많았다.

2009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과 편의점, 옷가게, 사무실 등 소방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부대시설의 입점이 허용됐지만, 주유소 부대시설은 1층에만 들어올 수 있었고 면적을 500㎡까지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제한을 완화해 앞으로는 헬스장, 미용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점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만드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매출도 늘었습니다**

●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건의하며 주유소 부대시설 허용 업종과 제한 면적 확대를 꾸준히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업종이 주유소 부대시설로 들어설 수 있게 만들었다. 또 면적 제한은 1,000㎡로 두 배 늘리고, 1층에만 한정했던 부대시설을 2, 3층에도 가능하게 했다.

2015년 7월까지 기준 변경 허가를 받은 112개 주유소에서 302억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했다. 2014년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생긴 한 주유소는 복합건물에 패스트푸드 전문점, 패션아울렛, 피자가게 등이 입점했고 3~5층은 일반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꽃배달 서비스, 렌터카 알선 서비스 등 주유소 운영자가 직접 소자본 무점포로 운영하는 사업들도 인기다.

이제 주유소는 단순히 주유만 할 수 있는 삭막한 장소에서 생활편의성과 휴식기능도 갖춘 ‘친화적 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는 중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민안전처 ☎ 044-205-7272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유소 내에는 물품 판매 · 대여업, 중개업 부대시설만 입점 가능</li> <li>주유소 부대시설은 1층에만 입점 (면적 500㎡까지 제한)</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 미용실, 운동시설, 피부관리실 등 주유소 내에 입점할 수 있는 부대시설 업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유취급소의 부대용도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개정 (2014년 4월)</li> </ul> </li> <li>전 층에 부대시설 입점이 가능 (면적 1,000㎡까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4년 6월)</li> </ul> </li> </ul>	

# 08

## 즉석판매식품, 간편하게 집에서 주문할 수는 없나요?



###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즉석판매식품

- 전통시장에 가보면 다양한 먹을거리가 우리를 반긴다. 순대, 부침개, 튀김 등 워낙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 안 먹고는 못 지나갈 정도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과 기름에 금방 튀긴 먹음직스러운 고기전은 나중이라도 전화번호를 알아두고 집에서 주문해서 먹고 싶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두 법에 저촉된다.

경기 군포시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김은영 씨는 20년 넘게 떡을 만들어 팔아왔다. 아들의 권유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려고 누리집을 개설했지만 시청으로부터 단속 진화를 받게 됐다. 누리집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격을 표시하거나 배달 주문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제조연월,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 표기 문제로 인해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추후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1차 15일, 2차 1개월(30일), 3차 3개월(90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으로 업종을 바꿔야 하는데, 품질검사 등 20가지가 넘는 허가기준을 맞춰야 가능했다.



**따뜻하고 맛있는 즉석판매식품, 이제 집에서 맛볼 수 있어요**

● 2014년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즉석판매·제조식품도 쿼와 택배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는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판매 방법을 택배나 쿼 서비스 등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인터넷 판매와 택배 물류서비스를 바탕으로 전통시장도 이제는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상품권과 쿠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719-2016

**개선 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

**개선 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을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4년 5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가 제조한 식품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쿼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해 배달·판매하는 경우 허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4년 10월)

# 09

아름다운 저수지 야경,  
배를 타고 즐길 수는 없나요?

“다른 관광지에는 야간에도 배를 운행하는데, 왜 이곳만 안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야간에는 배를 운행할 수 없다?

- 수성못은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 명소다. 1925년 가뭄과 홍수로 황폐했던 들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만들어진 대구 수성못은 이후 인근 지역의 택지 개발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변공원으로 변신해 시민들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연인들과 가족들에게 인기 만점인 유람선과 오리배는 수성못의 트레이드 마크다.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자 수성구는 저수지를 야간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수성못 유·도선 사업 낙찰을 받은 수성레이크보트의 박덕 대표도 착실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농업용 저수지는 야간 운행에 필요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일몰 이후 유·도선을 운항하는 야간 레저업 등은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름철 유람선을 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야경을 만끽하고자 놀러 왔던 관광객들은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여름밤 저수지의 낭만, 이제는 유람선을 타고 느껴보세요**

-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고 도심 속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 수성못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박 대표는 지자체에 꾸준히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수성구 역시 꾸준히 관련 기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 결과 2016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지침'이 개정돼 야간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엔 야간 유·도선 운행이 허용됐다. 수성레이크보트도 2016년 4월부터 야간에 오리배와 10인승 유람선 2척을 운항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수성못처럼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나 과도한 규제라는 현장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852

**개선 전**

- 저수지 유람선 운행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

**개선 후**

-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야간 유람선 운행 허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 개정 및 시행(2016년 2월)

2016년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규제개혁 체감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모전 당선작(요약)입니다.

## 종량제 봉투의 지역제한 해소로 인한 알뜰한 살림의 시작

최우수상

홍유기

수년간의 취업 준비 끝에 드디어 취직했다. 하지만 막상 취직을 하니 살 집이 문제였다. 지방에서 30년 가까이를 지냈던 나는 서울에 마땅한 연고도 없었다. 결국 내가 선택한 장소는 노량진 ‘고시원’이었다. 혼자 살다 보니, 생활용품도 음식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버리는 쓰레기 양도 많지 않았다. 고향집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큰 용량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했지만, 자취 시작부터는 10매 이내로 구입해서 사용했다.

자취 시작 1년 뒤인 2015년, 서울시는 일제히 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했다. 몇 십 원, 몇 백 원 차이였지만 자취를 하는 사회초년생에게는 그 비용마저 상당한 부담이었다. 당시 나는 동작구에서 직장 근처인 강남구로 이사를 가게 됐다. 좁디좁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넓은 곳으로 오니 기분이 좋았다. 이삿짐을 풀고 정리를 하다 문득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바로 종량제 봉투였다.

당시 거주지에서 이사 온 전입자들은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없어 전입 전 주소지에서 남은 봉투를 환불하거나, 이사 온 거주지에서 사용하는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했다. 만약 이전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했다. 나는 전에 쓰던 13매 정도의 쓰레기 봉투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다 구석에 두고 잊은 채 지냈다.

2016년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해도 종전 사용했던 쓰레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했다. 나는 구석에 놓아둔 13장의 봉투를 찾아 사용할 준비를 했다. 전입신고 시 10매까지 기존 봉투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이사 온 지역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용량에 상관없이 말이다.

1995년 종량제 봉투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가정과 사업장의 환경지킴이로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 이견을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처럼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한몫을 할 것임이 분명하다.

환경을 지키는 일은 국가기관과 지자체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협심을 이끌기 위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발걸음을 해주기를 바란다.

## 2 중소기업 성장 지원

실패의 부담을 덜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작은 기업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0.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고용 부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년 6월) .....	28
11. 1인 창조기업 업종 포괄적 허용 (중소기업청, 2015년 2월) .....	30
12.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관세청, 2015년 9월) .....	32
13. 시동 걸린 카셰어링 서비스 (경찰청, 2017년 하반기) .....	34
14. 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 허용 (해양수산부, 2016년 7월) .....	36
15. 4대 보험 신용카드 납부 허용 (고용노동부, 2014년 9월 / 보건복지부, 2015년 4월) .....	38
16.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축 (법무부, 2016년 5월) .....	40
17. 경품규제 100%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7월) .....	42
18.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 대수 완화 (국토교통부, 2016년 7월) .....	44

# 10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의무고용 부담을 줄일 수는 없나요?



### **화장품 사업 시 제조판매관리자의 의무고용**

● 약 7,000년 전 이집트에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화장품은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기대 속에 남녀노소 모두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국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품질이나 안전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에게도 부과해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는 약사나 의사 면허 소지자 혹은 생물·화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 전공자여야 한다. 학과와 상관없이 이공계 전공자라면 가능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와 비교하면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셈이다.

착한피부의 정유선 대표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화장품 기업 사업가로 변신한 주부 CEO다. 육아로 인한 피부트러블을 직접 고치고자 시작한 화장품 연구가 오늘날 착한피부를 만들게 한 원동력이었다. 천연화장품에 대한 국내외의 큰 관심 속에 착한피부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정 씨의 고민도 늘어났다. 창업 3년 차인 착한피부는 이윤보다는 판로개척에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담이 심했다. 현행법상 1인 기업에 한해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이 가능해져 고용부담이 줄었어요.”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정유선 대표처럼 화장품 중소기업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016년 5월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1인 기업의 경우에만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원 수가 10인 이하인 제조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719-3409

**개선 전**

-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제조판매관리자를 고용하여야 하나, 제조판매업자가 자격이 있는 경우 1인 기업에 한해 겸직 가능

**개선 후**

- 10인 이하 기업까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 겸직 가능  
- 「화장품법 제3조 4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개정(2016년 6월)

# 11

## 똑같은 1인 창조기업인데 저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창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업종이 제한돼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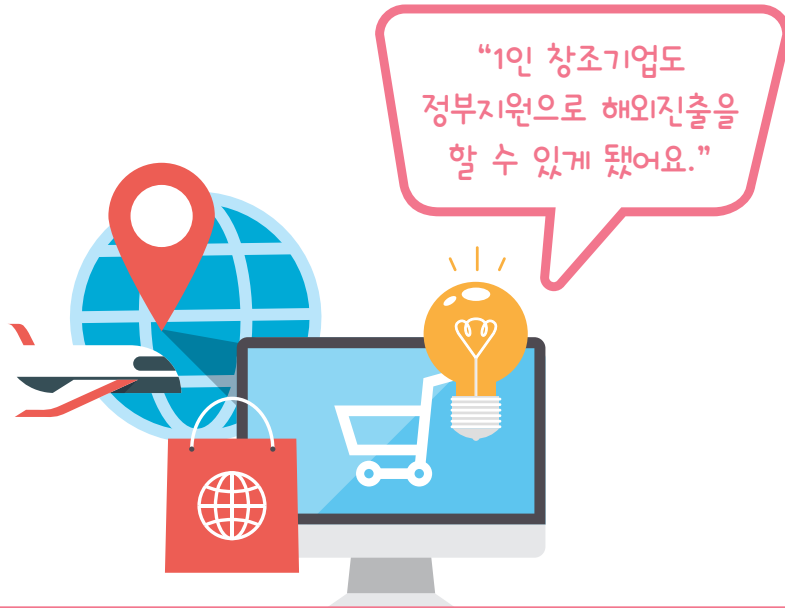
### 1인 창조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판로 개척

● 전통적인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가치는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화 역량과 시장의 규모에 비례했다. 이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이 선호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기업, 혼자서도 창업이 가능한 개인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손·발팩으로 유명한 엔젤아로마스토리의 윤경 대표는 창업 전 가정용 의료기기 업체에서 근무했다. 새로운 아이템을 분석하던 중 기존 보습 기능만을 갖춘 화장품 팩에서 히팅과 쿨링 기능이 추가된 팩의 아이디어에 착안해 창업을 결심했다. 창업 4년째인 엔젤아로마스토리는 국내 리테일업체에 진출한 것은 물론 중국 전역의 화장품 매장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엔젤아로마스토리의 성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만들어 틈새시장을 공략했다는 것과 더불어 창업 초기 다양한 정부지원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1인 창조기업들은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지원의 업종도 한정적이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1인 창조기업 업종 범위 확대로 더 많은 기업에게 정책적 지원 가능**

●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과 창조적 기업가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다양한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아이디어나 제품의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브랜드 개발, 방송 광고 등을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한 '벤처창업 규제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중소기업청은 2015년 2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업종을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등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산업 관련 업종을 비롯해 205개 업종, 15만 7,000개의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 졌다.

향후에도 정부는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규 유망업종 현황 등을 매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성장 촉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 042-481-4553	
<p><b>이렇게 달라졌어요!</b></p>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은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한정(434개 업종)</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다양 (2015년 8월 이후 639개 업종)</li> <li>-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2월)</li> </ul>

# 12

##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품목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복잡하고 어려운 수출신고 절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 국내에 전자상거래가 도입된 지 20년. 그동안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판매(역직구)는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의 K뷰티, K패션 제품을 사기 위해 국내 쇼핑몰에 접속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메이크숍 서비스를 제공해 온 코리아센터닷컴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진다. 해외진출을 고려하는 쇼핑몰이 많아지면서 고객사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복잡한 수출신고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였다.

통상 역직구 쇼핑몰은 수작업으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건당 5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관세사를 통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당 1~2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쇼핑몰은 우체국, 특송업체 등을 통한 목록통관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거나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관세환급, 수출실적 인정 등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역직구 수요에 맞게 수출신고 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외수출 활성화로 제2의 천송이 코트, 유시진 팔찌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도입, 한번의 클릭으로 수출신고 끝!**

- 업계의 수출신고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통관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절차 간소화’를 시행했다. 지난 2013년 57개였던 수출신고 항목을 33개로 줄였고, 수출신고 없이 국제우편으로 해외배송하는 200만 원 이하의 제품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건별로 작성해야 하는 수출신고 항목이 불편하다고 판단해 지난 2015년 11월 관세청과 쇼핑몰 업체 간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계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이용하면 쇼핑몰이 보유하고 있는 15개 내외의 판매정보와 기초정보를 활용해 33개의 수출신고 항목을 한번에 자동으로 일괄 수출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과 직접 전산연계하거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KT-NET, KC-NET)의 수출신고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치열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관세청 ☎ 042-481-7814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물품 건별로 수출신고 항목을 작성</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상거래 업체의 판매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일괄 전송받아 자동으로 수출신고 처리</li> <li>-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2015년 9월)</li> </ul>	

# 13

## 카셰어링 서비스, 안전을 위해 정확한 운전면허 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없나요?



● 국내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도입된 지 6년째다. 카셰어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예약하고 필요한 시간만큼 무인 형태로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로, 비싼 차량 가격과 여러 유지비로 인해 차는 소유가 아닌 이용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성장했다.

카셰어링의 장점은 '편리함'이다. 하지만 편리함만을 강조했던 무인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카셰어링 업체들의 가장 큰 걱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바로 이용 고객들의 본인 확인 절차다. 그동안 차량공유업체는 차량 대여 시 운전자의 면허정보를 알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하거나, 경찰청(efine.go.kr) 또는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 누리집에서 운전면허 등의 정보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운전자의 면허취소 여부, 정지기간, 종별 등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면허정지자 또는 원동기 면허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회원가입 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으면 사전 적발은 어렵다.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사고를 일으킨 이용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면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업체들은 규제 완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실시간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 구축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발생 예방**

● 그동안 정부는 카셰어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했다.

운전 부적격자를 판별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기에 운전면허정보 제공 범위를 현재 존재 여부에서 면허정지 여부, 종류(1·2종 등)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카셰어링 업체가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2017년 하반기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앞으로 차량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차량공유업체에 제공하도록 경찰청에 동의하면, 차량공유업체는 운전면허정보 확인시스템상 정보를 확인한 후 차량을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카셰어링 업체의 실시간 운전면허 온라인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카셰어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이렇게 달라졌어요!</b> <span style="float: right;">경찰청 ☎ 02-3150-2650</span>	
<b>개선 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전면허증의 정보일치 여부만 조회 가능하며,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별, 취소·정지 여부 등 자격 상태 확인 불가</li> </ul>	<b>개선 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공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2017년 하반기)</li> </ul>

# 14

## 해양심층수를

## 탄산수로 제조하면 불법인가요?



“샘물과 해양심층수는 다 같은 물인데, 왜 해양심층수는 탄산수로 제조하면 안 되나요.”

### 🔍 국내 1,200억 규모의 탄산수 시장, 해양심층수는 진입할 수 없다?

- 해양심층수는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하의 바닷물이다. 깊은 바다에서 천천히 흐른다. 대기 중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해양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노르웨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뿐이다.

정부는 2005년 해양심층수연구센터를 건립하면서 해양심층수 연구를 본격화했다. 2008년 4월 강원도 양양에서 먹는 해양심층수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해양심층수 산업시대를 맞았다.

2006년 3월 설립된 강원심층수는 2009년부터 해양심층수를 생산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국가로 수출 판로를 개척하는가 하면, 음료와 식품분야에서 다각적인 활용을 모색했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가 탄산수를 선호하는 추세다 보니 강원심층수도 해양심층수로 만든 탄산수를 선보이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 해양심층수법에 따라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공장 외에 별도의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탄산설비만 추가설치하면  
탄산수 제조가 가능합니다.”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다양한 제품 개발이나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된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6년 7월부터 해양심층수로 탄산수 제조가 가능하도록 해양심층수 제조공정에서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했다.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용 부담금을 5년간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나아가, 해양수산부는 동해안이 해양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강원도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선, 2024년까지 해양심층수를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기업에 대한 경영 및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해양심층수 테마파크’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해 지역 농수산물 생산, 가공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주민의 소득 제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해양수산부 ☎ 044-200-5248

**개선 전**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불가

**개선 후**

- 해양심층수에 탄산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시설 설치 시 해양심층수를 탄산수로 제조 가능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 시설기준) 개정 (2016년 7월)

# 15

## 사업장 4대 보험료, 꼭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나요?



###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사업주에게는 때로는 부담

● 4대 보험은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다. 노후를 대비하는 '국민연금보험', 갑작스러운 실직에 대비하는 '고용보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보험',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이자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사업장 운영주 입장에선 때론 큰 부담이 4대 보험료다. 세금은 이윤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지만, 4대 보험료는 고용자를 두는 이상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경영위기가 닥치면 4대 보험료의 압박으로 종업원을 내보내고 폐업까지 고민하기도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김건업 씨는 매달 보험료 납입이 다가올 때마다 여기저기 전화를 하느라 바쁘다. 20명 남짓한 직원들의 보험료를 내기 위해 현금을 빌리기 위해서다. 광고회사는 대부분 제안을 하고 수주를 하면 해당 업체에서 선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업무가 종료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자금 유동성이 취약하다. 매달 현금으로만 결제를 해야 하는 보험료 납부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모든 사업장, 원하는 결제수단으로 보험료 납부 가능**

● 정부는 지난 2011년 4대 보험 운영비 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카드납부를 금지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일부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예외적으로 카드납부를 허용했다. 하지만 고객 편의와 소규모 중소기업의 자금 운영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도 이 같은 필요성에 공감해 2014년 6월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을 즉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체납보험료만 카드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단, 카드납부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은 월 1,000만 원 이하(단,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상한 폐지)이며, 신용카드로 낼 때는 납부금액의 0.8%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고용노동부 ☎ 044-202-7351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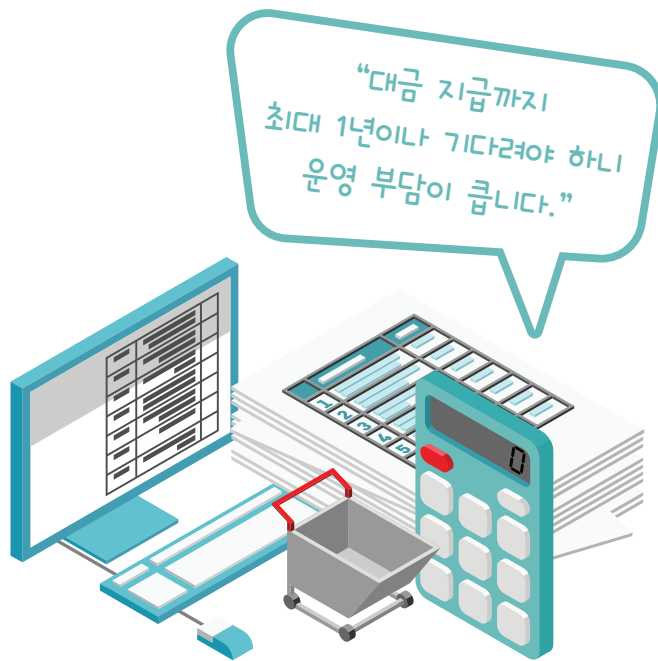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체납보험료만 카드납부 허용

**개선 후**

-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등 비현금성 결제수단을 통한 보험료 납부 허용
- \* 수수료율 : (신용카드)0.8%, (체크카드)0.7%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4년 9월)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2015년 4월)

# 16

## 전자어음 만기기간, 대금 지급까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대금 지급까지  
최대 1년이나 기다려야 하니  
운영 부담이 큼니다.”

### 결제 기일 장기화, 어음 부도로 회수할 수 없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 어음도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어음으로 탈바꿈해 2015년 국내 전자어음 시장은 470조 원을 돌파했다. 전자어음은 믿을 수 있는 관리기관을 통해 발행되고 배서와 교환도 가능해 종이어음보다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 또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관리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하지만 장기어음 발행이 빈발하면서 어음을 받은 업체들이 실제 현금화하기까지 지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중소 건설 시공사를 운영하는 이덕현(60) 씨는 2012년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받은 계약대로 10억 원 규모의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계약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전자어음)로 대신 받았다. 채권은 만기가 6개월이었지만, 대형 건설사는 상환 도중 법정관리를 신청해 이 씨의 업체는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그동안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까지 지게 된 것이다.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일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자금운영이 원활하게 됐어요.”

**어음 만기 단계적 단축 시행으로 원활한 현금 흐름이 가능해졌습니다**

● 많은 중소기업들은 어음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 2014년 중소기업중앙회가 4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음 만기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78.4%가 ‘어음 만기 단축 필요성’에 찬성했다. 하지만 당시 어음법상에는 어음 만기 규정이 없었다. 또한 기업이 영세할수록 결제 기일이 장기화돼 자금 운영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어음부도로 인해 자금이 미회수될 수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10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어음법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선진 법제포럼을 개최했고, 포럼에서 모아진 자료를 통해 2016년 5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존 1년이던 전자어음 만기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최장 만기를 6개월로 단축하고 이후 3년간 매 1년마다 1개월씩 단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어음 만기를 3개월로 단축하면 3조 2,730억 원 상당의 어음할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법무부 ☎ 02-2110-3256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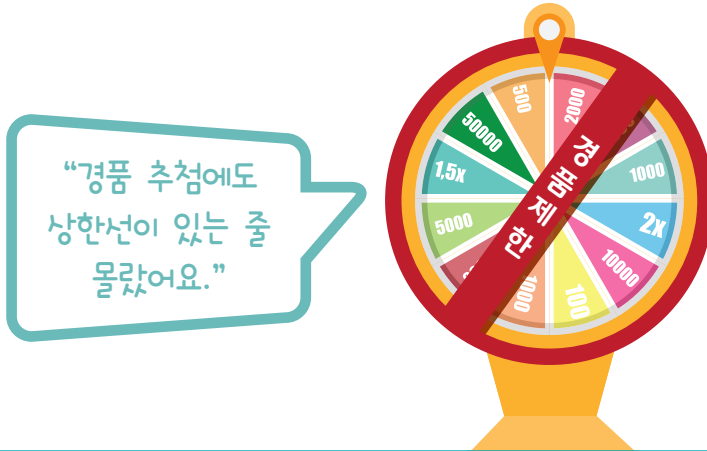
-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만기 1년)

**개선 후**

- 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로 최종 단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2016년 5월)

# 17

##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 추첨, 값비싼 경품은 불법인가요?



### 사행성 조장 및 무리한 소비행위에 대한 경품 규제

-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경품행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경품도 세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다. 아파트나 자동차가 등장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문화·스포츠·레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백화점 상품권, 스키·호텔 이용권 등의 경품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경품은 구매와 상관없이 매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현상 경품’, 구매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경품’, 구매 고객 중 일부에게만 주는 ‘소비자 현상 경품’의 3가지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공개현상 경품’과 ‘소비자 경품’은 경품 금액 상한선이 없지만, ‘소비자 현상 경품’은 2,000만 원 이내 등의 제한이 있다. 경품에도 제한이 있을까 싶지만, 지난 1982년부터 고시로 규제해 왔다. ‘사행성 조장’ 우려 때문이다. 경품을 받으려고 물건을 무리하게 사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소비자 현상 경품’은 지난 1999년 상한선이 폐지됐다. 하지만 경품 과열 현상과 사행성 조장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0년에 한도가 100만 원으로 다시 정해졌다. 이후 상한선은 계속 높아져 2,0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소비자 인식과 역량, 유통분야 경쟁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품제공과 가격 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요즘에 경품제공만을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35년 만에 경품 규제 완전 폐지로 소비자 이익 증가와 소비 진작 가능

-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률적인 경품 규제는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였다.

35년 만의 '구매자' 대상 경품 상한선 규제 폐지로 인해 앞으로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전망이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공정거래위원회 ☎ 044-200-4618

**개선 전**

- 소비자 현상 경품 제공 한도 규제
- 단일 경품 2,000만 원 이하, 경품 총액 상품 예상 매출액 3% 이하

**개선 후**

-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 (단일 경품가액 및 총액한도 폐지)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경품고시 폐지(2016년 7월 시행)

# 18

## 렌터카 사업,

## 차량 등록대수 기준을 꼭 맞춰야 하나요?



### 초기 창업 비용 때문에 중소 사업자들은 시장진입조차 어렵습니다

-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50만 3,895대. 2010년 처음으로 1만 대를 등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렌터카 시장은 장기 렌털과 단기 렌털로 나뉜다. 그동안 법인 위주의 장기 렌터카 시장에 집중했던 렌터카 업체들은 최근에는 개인 장기 렌터카 시장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 20%의 성장률을 보이며 이제는 렌터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 렌터카 시장의 성장은 합리적 소비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굳이 차를 사지 않고 빌려 타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택시운전을 했던 유명균(53) 씨는 최근 렌터카 사업을 준비하다가 창업을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렌트업은 자본금 규모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고지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차량 등록대수였다. 최소 차량 등록대수인 50대를 채우지 못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낮아진 진입장벽으로 렌터카 시장 활성화 기대**

- 현행 50대 이상의 규정을 맞추려면 차량 구입비, 보험료, 주차장 확보 등으로 약 15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었다.  
 현재 렌터카 시장에선 주요 대기업 5개 사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세 렌터카 사업자들은 시장 경쟁을 하기도 전에 큰 부담을 지고 시작해야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영업구역이 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대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창업 시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0대로 렌터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연 3억 4,000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30대로 시작할 경우에는 연 2억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창업비용을 약 40% 줄일 수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앞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렌터카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토교통부 ☎ 044-201-3820

**개선 전**

- 렌터카 사업 등록대수 기준을 50대 이상으로 제한

**개선 후**

-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하나의 지역 (특별시·광역시·시·군)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등록대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2016년 7월)

2016년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규제개혁 체감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모전 당선작(요약)입니다.

## 국유림 적치 대규모 광산 폐석 자원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규제완화

최우수상

신 유 근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규제개혁을 챙긴다고 하는데, 사장님 회사의 안전을 한 번 올려 볼까요?”

영월군청 규제개혁팀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동안 몇 차례 영월군청을 통해 도청, 중소기업청, 환경부, 산림청 등에 규제개선을 요청했지만, 시원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영월군청 규제개혁 담당자와 나는 산지관리법을 살살이 살피면서 총리실에 건의할 내용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강원도 영월의 시멘트 광산에 위치한 골재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할 때 발생한 폐석을 원료로 골재와 조경석을 생산한다. 문제는 회사 앞에 놓인 폐석산이었다. 회사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전부터 무려 30년 동안 적치됐던 폐석은 그 양이 4,000만 톤이나 됐으며, 폐석으로 이룬 산은 해발 630미터에 달했다. 대로변에 위치한 거대한 폐석산은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비산먼지를 발생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회사가 위치한 광산은 국유림이어서 산림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국유림 내 광산에서 발생한 폐석은 산림청장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해 반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국유림 산지에서의 토석 반출 절차와 동일해 광업 부산물인 적치 폐석의 재활용과 차별을 두지 않고 있었다. 즉, 폐석 재활용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유림 산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일정한 토석 반출에 대해서 규제를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4,000만 톤씩 적치된 광업 부산물인 폐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다.

영월군청 규제개혁팀의 도움으로 마침내 국무총리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계획안이 올라갔다. 이후 나는 담당 전문위원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진 뒤 제6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국무총리님의 원편에 앉게 된 나는 순서가 되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온 글을 읽었고, 산지관리법 일부에 대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산지관리법 26조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는 알림 전화를 받게 됐다. 이제 광산 폐석을 토석과 구별해 접근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돼 너무나 기뻐다. 기업이 처한 문제를 같이 고민해준 지자체, 그리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3 신성장동력 기반 마련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걸림돌은 빼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탄탄한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19. 의료용 3D 프린팅 활성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12월) .....	48
20.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 확대 (국토교통부, 2016년 7월) .....	50
21.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전국적으로 확대 (국토교통부, 2016년 11월) .....	52
22. 규제완화를 통한 재활용 신기술 사용 (환경부, 2016년 6월) .....	54
23. 농업용 소형 드론 용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6월) .....	56
24. 마리나 선박 활용한 창업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2015년 7월) .....	58
25. 친환경 이동수단 - 삼륜형 이륜차 제작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2017년 1월) .....	60
26. IoT 상용화 위한 주파수 출력 기준 개선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5월) .....	62

# 19

## 의료용 3D 프린터로 만든 맞춤형 의료기기,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안전성 및 성능평가 기준이 없어 제품 상용화에 애를 먹다

- 3D 프린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외에도 금속 등 다양한 소재로도 출력이 가능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3D 프린터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인체 기관을 3D 프린터로 쉽게 제작이 가능해 수술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두개골·얼굴뼈·척추뼈 등 신체 부위를 찍어내 환자에게 알맞은 맞춤형 임플란트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디쎬이의 장종욱 대표는 2003년 창업 이후 국내 의료기기 확대 추세에 맞춰 신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주력했다. 2010년부터는 두개골, 안와, 척추 수술 등에 활용하고자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3D 프린터를 수입했다. 문제는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된 의료기기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평가 기준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임플란트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는데 6~12개월 이상 소요됐고, 보형물 크기가 달라질 경우에는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당장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이 많지만 제품 개발과 출시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운영**

- 업계의 고민에 식약처는 2015년 12월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응답했다. 의료업계에서 연구개발 중인 3D 프린터 활용 품목들이 시행착오 없이 제품화되기 위해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결과였다. 또한 2016년 10월 및 12월에는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 세부 품목별 4건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각각 마련하였고, 현재는 3D 프린팅 기반 인체이식용 기관지 지지체 등 3개 사업을 시행중이다. 또한 미래부·복지부·식약처가 '3D 프린팅 기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 공동기획사업을 선정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74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앞으로 의사 책임 하에 상황에 맞는 의료기기를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게 돼 응급상황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해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043-719-4557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D 프린터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품목별 성능 평가 가이드라인 미비</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운영(2015년 12월)</li> <li>• 품목별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추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등 4개 안전성·유효성평가 가이드라인(안) 마련(2016년)</li> <li>- 3D 프린팅 기반 인체이식용 기관지 지지체 등 3과제(6억 원) 사업 추진(2016년)</li> <li>- 3D 프린팅 기반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기술개발 미래부/복지부/식약처 공동기획사업 선정 (2017년 ~ 2021년) 총 374억 원</li> </ul> </li> </ul>	

# 20

## 드론을 이용한 신산업, 기술은 발전하는데 상용화는 아직인가요?



### 지지부진한 드론 산업, 문제는 규제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드론. 드론이란 비행기·헬리콥터와 같은 형태로 제작돼 무선으로 자율주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군사용으로만 활용되던 드론이 민간용으로 산업 영역을 넓히면서 이에 따른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CJ대한통운은 일찍부터 자체 연구소인 종합물류연구원을 중심으로 'D-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드론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 결과물이 독일 마이크로드론사와 합작해 개발한 '스카이도어'라는 드론이다.

2015년 10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영월, 전주 등 시범사업 전용구역에서 개발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 비행을 진행하는 등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드론 연구와 개발, 상용화에는 규제가 많았다. 그동안 드론은 농업·촬영·관측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었고, 드론의 특성에 맞지 않는 평가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시험 준비들이 많았다.

“이젠 택배도 드론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 이에 정부는 드론 기술의 진일보에 발맞춰 규제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안전이나 국가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산업 분야로 드론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연, 광고 등 창의적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활용한 사업 등록 시 필요했던 자본금 요건(법인 3,000만 원, 개인 4,500만 원)을 폐지하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비행 여건도 개선한다.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전용 비행구역을 확대(18 → 22곳) 하고,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연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진다. 그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돼 불편했던 비행 승인과 항공촬영 허가 등 각종 신청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향후 10년 간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조 7,000억 원(드론 활용산업 8조 9,000억 원, 제작산업 3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토교통부 ☎ 044-201-4241

🔧 개선 전	⚙️ 개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론 사용사업은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 활용이 제한되고 사업 자본금 요건(법인 3천만 원, 개인 4.5천만 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움</li> </ul> <p><small>*사업범위 : 농업지원, 항공촬영, 관측 및 탐사, 조종교육</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을 허용하고 소형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업등록 시 자본금 요건 폐지</li> <li>-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7월)</li> </ul>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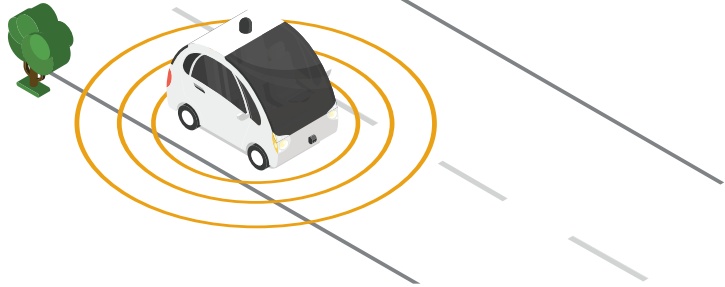
##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은 불가능한가요?



### 🔍 제동 걸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지정된 도로에서만 가능한 자율주행 시험

● 독일, 미국,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30여 년 이상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은 물론이고 정부도 적극 나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도 근래에 들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이경수 교수는 '차량동역학 및 제어연구실'의 석박사 연구진들과 지난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차량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성공했지만, 큰 문제에 봉착한다.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구간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일부 고속도로와 국도에만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자율주행차들은 다양한 도로환경에서 운행을 통해 쌓인 데이터들이 기반이 돼야 더 완벽한 주행이 가능하지만 규제로 인해 연구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시험주행으로  
자율주행차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운행 허가기준 마련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시험운행 가능**

●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2016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연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같은 해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험운행 구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임시운행 허가차량에 대해서는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해제하여 자유로운 원격 자율주차 기능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9월과 10월 각각 대구규제프리존과 판교창조경제벨리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단지로 지정하였으며,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 이렇게 달라졌어요!** 국토교통부 ☎ 044-201-3849

**📍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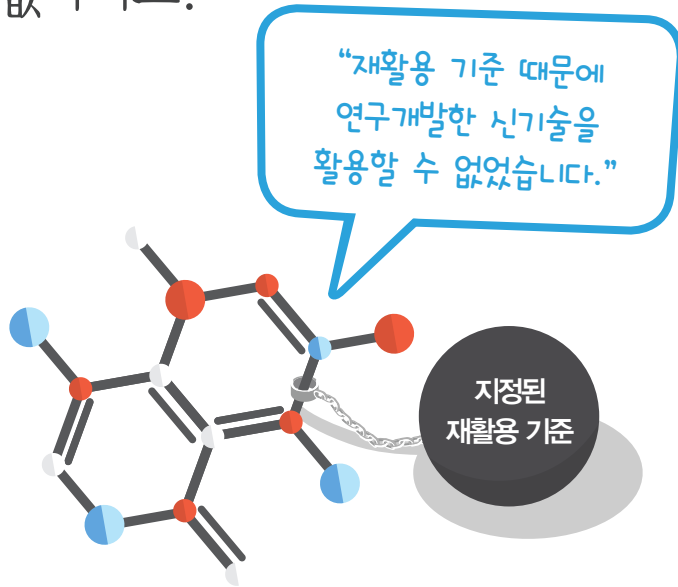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구간에서만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가능

**⚙️ 개선 후**

-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로 시험운행 구간 확대  
(단,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시험운행 시 사고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 제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6년 11월)

# 22

산업폐기물에서 가치 있는  
산업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니요?



## 특허까지 낸 신기술, 하지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뜨거운 배출가스와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폐기물은 더 이상 폐자원이 아닌 산업 원료로 재조명받고 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 때 주로 쓰이는 페로니켈은 니켈과 철의 합금으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페로니켈은 제조 공정에서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높은 슬래그가 발생하는데, 화학적 안전성 때문에 재활용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슬래그 내에 포함된 산화마그네슘, 산화규소, 산화철 등의 유용 성분은 쉽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연간 약 150만~200만 톤의 페로니켈 슬래그가 배출되는데, 버려지는 슬래그에서 마그네슘 성분을 추출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모노리스 박민규 대표는 8년간의 연구 끝에 페로니켈 슬래그에 함유된 실리카와 마그네슘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해 상업용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슬래그 처리방법을 개발했다. 하지만 특허까지 낸 기술은 사업장 법적 문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일반폐기물인 철강 슬래그(고로 슬래그)로 분류돼 시멘트 원료, 골재 등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 자원재활용 기술로 수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

- 모노리스는 2016년 3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모노리스의 건의 내용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즉각 검토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정된 용도와 방법 외에는 재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Positive) 체계에서, 환경성 검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체계로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부도 산업 공정에서 버려지는 자원들의 재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활용 용도만 허용하는 것은 재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불합리하다는 것을 공감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모노리스의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 길이 열리면서 자원 재활용을 통해 연간 3,500억 원의 수익 창출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이렇게 달라졌어요!		환경부 ☎ 044-201-7396
<p><b>🔧 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로니켈(철과 니켈 화합물로 스테인레스 스틸의 주원료) 생산 후 발생하는 부산물인 페로니켈슬래그는 시멘트, 원료, 골재 등 법정 용도로만 재활용 가능</li> </ul>	<p><b>⚙️ 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용도에 마그네슘화합물과 규산소다 항목 추가</li> <li>-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개정(2016년 6월)</li> </ul>	

# 23

## 농업용 드론, 소형 살포기도

###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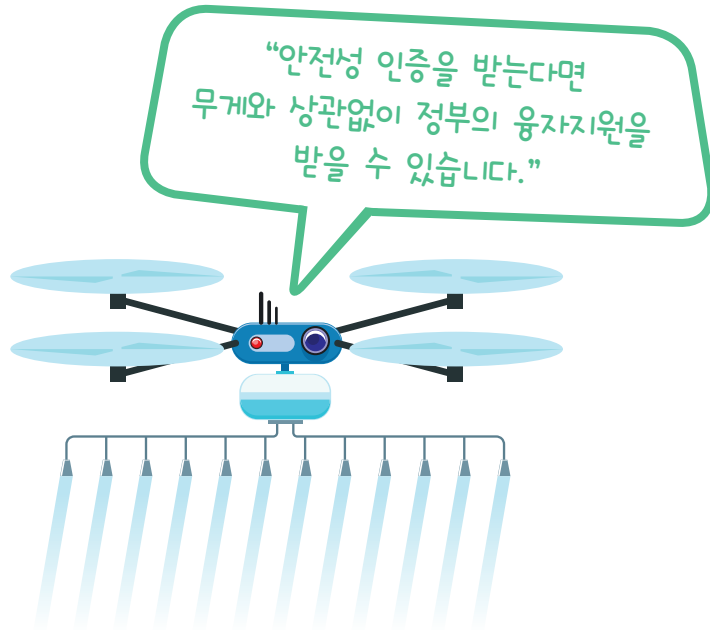
**농업용 소형 드론, 장점은 많은데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상용화가 힘듭니다**

● 국내 벼농사의 기계화는 경운, 정지, 이앙, 방제, 수확 등 주요 작업에서 97.8%를 달성했지만, 방제 작업 기계화는 사람이 직접 기계에 타야 하는 승용 방제가 17.3%에 불과하며 나머지 82.7%는 농업인이 직접 눈에 들어가는 수고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렴하고 편리한 농업용 드론의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농업용 드론은 일반 동력 살포기의 1/10 수준 방제시간, 무인헬기의 1/4 수준 구매비용, 1/10 수준 운영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다.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창업한 메타로보틱스의 박기선 대표는 농촌에서 땀 흘리는 농민들의 노고를 덜기 위해 농업을 아이টে姆으로 선정하고 드론 개발에 힘쓴 결과 농업용 드론 ‘반디’를 만들었다. 박기선 대표가 가장 주목하는 드론은 12Kg 이하의 소형 드론이다. 무인항공기 조종자격증이 필요 없는 12kg 이하의 드론은 비행금지구역에서도 추가 승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구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 구입자금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소형 드론도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정부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의 안전성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12Kg 이하 드론은 안전성 인증 면제 대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규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준 것이 오히려 농기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 모순이 생긴 것이다.

드론은 언제든지 추락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무게로 인증검사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을 제정·공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안전성 인증을 받을 수 없던 농업용 소형 드론도 검정을 받으면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이 드론을 구입할 경우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1840

**개선 전**

- 농업기계 구입지원 대상인 무인항공살포기 중 12kg 이하의 소규모 살포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후**

- 무게와 상관없이 안전성 검정(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받은 무인항공살포기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구입지원(용자 80%)
  -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 방법 및 기준」 제정, 공표 (2016년 6월 신설)

# 24

## 마리나 선박 대여업, 사업장 등록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창업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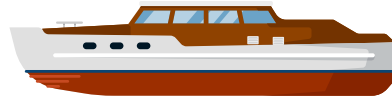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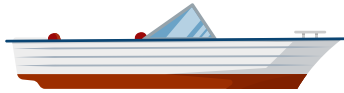
### 창업, 까다로운 사업장 등록 절차와 비용이 걸림돌

- 마리나란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되거나 이용하는 선박의 출입과 보관, 승선과 하선 등을 위한 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마리나 산업이란 이런 마리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요트 레저관광, 요트 정박 등의 각종 서비스업과 각종 해양레저장비의 제작, 마리나 시설 조성 등 연관 산업들을 총칭한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에 발맞춰 요트탈래의 김건우 대표는 해양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요트대여업을 준비했다. 개인 소유 요트의 연간 이용률이 한 달이 안 된다는 점과 밤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 요트를 임대받아 사업을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현행법상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대여업 형태의 사업은 수상 레저사업, 유선사업으로 등록·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비상구조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서 구비 등의 등록조건이 요구되며, 운항구역 등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하려면 ‘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별도의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승객 대기실과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비상구조선을 구비해야 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규제의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개인 요트로도  
선박 대여업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 요트도 렌탈 길 열려 marina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김 대표처럼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 항만법’)’ 개정을 통해 ‘마리나 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법률의 시행에 따라 5톤 이상의 마리나 선박을 활용한 ‘마리나 선박 대여업’ 사업등록도 가능케 했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은 개인 소유 요트도 렌탈의 길을 열어 마리나 선박 소유자는 임대를 통해 요트 관리비를 저감하고, 임대업자는 사업용 마리나 선박 확보가 용이해졌다. 정부는 앞으로 다양한 마리나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거점 마리나 항만을 중심으로 동북아 인접국의 주요 마리나 항만과 교류·협력하고 국제 항해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망을 형성해 앞으로 국내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이렇게 달라졌어요!</b> <span style="float: right;">해양수산부 ☎ 044-200-5255</span>	
<p> <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척 요트·보트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매표소, 화장실 등), 비상구조선 등을 구비하여야만 사업 가능</li> </ul>	<p> <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장 등이 없어도 마리나시설을 임대한 경우는 1척 요트·보트로도 대여업 등 사업 가능 -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2015년 7월)</li> </ul>

# 25

## 친환경 삼륜형 이륜차를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규제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삼륜형 이륜차를 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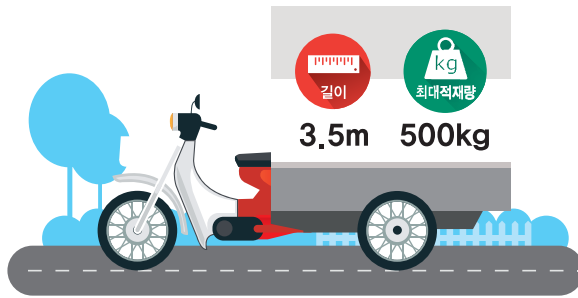
### 🔍 안전성 문제로 가로막힌 삼륜형 이륜차 개발

- 동남아로 여행을 가면 특색 있는 삼륜형 이륜차(삼륜 오토바이)를 만날 수 있다. 이색 볼거리도 제공하지만 삼륜형 이륜차는 좁은 골목도 들어갈 수 있어 유용한 화물 운송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 전기 이륜차 개발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화물용 전기 삼륜형 이륜차다. 오토바이의 기동성은 유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인 전기를 연료로 사용해 환경오염이 없다는 장점 때문이다.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인 그린모빌리티의 오승호 대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전기 삼륜형 이륜차 개발했다. 그린모빌리티는 경량 전기차용 모터 제어기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 핵심부품인 구동모터와 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와 협력해 개발한 완성차 브랜드 ‘모츠(Motz)’를 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고자 했던 그린모빌리티에 걸림돌이 생겼다.

삼륜형 이륜차는 자동차 관리법령에 의해 길이와 적재량을 엄격하게 제한받고 있었다. 법령에서 길이와 무게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안전성 때문이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다목적 용도의 삼륜형 이륜차,  
이제 곧 만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기동력 + 친환경 전기 에너지 = 삼륜형 이륜차**

● 그동안 전기차 업체들도 취약 부분을 보강하고자 삼륜형 이륜차의 차량 제어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왔지만, 규제로 인해 화물 운송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삼륜형 이륜차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막힌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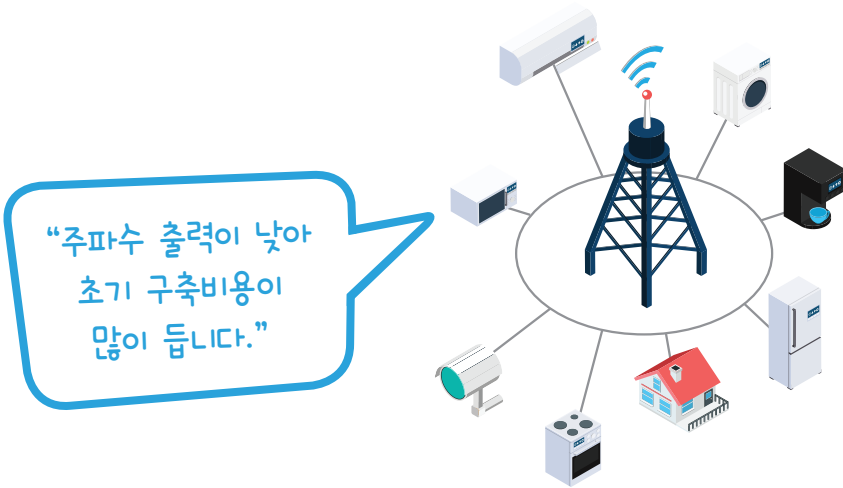
이 같은 업계의 요구에 정부도 규제개선으로 화답했다. 도심 밀집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신기후체제 하에서 일산화탄소 저감에도 효과적인 삼륜형 이륜차 활성화를 위해 2016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삼륜형 이륜차 규정을 길이는 3.5m, 최대 적재량은 500kg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삼륜형 이륜차의 규제개선이 대한민국의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이렇게 달라졌어요!</b> <span style="float: right;">국토교통부 ☎ 044-201-3850</span>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륜형 이륜차의 길이 2.5m, 최대 적재량 100kg으로 제한</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길이 3.5m, 최대 적재량 500kg으로 완화</li> <li>-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17년 1월)</li> </ul>

# 26

## IoT 전국망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저출력, 서비스 범위 제한으로 난관에 부딪히다

●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면 삶이 얼마나 편리해질까?  
IoT(Internet of Things) 환경에서는 센서나 통신 기능이 내장된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돼 주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를 다른 기기와 주고받으며 적절한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 IoT 산업은 '2020년 세계 시장규모가 1조 2,000억 달러(약 1,380조 원)에 달하고 IoT 전용망 시장 규모만 2,100억 달러(약 241조 원)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다.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 구축을 추진한다. 이미 구축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분명 IoT 전국망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규사업에 큰 걸림돌이 생겼다. 바로 주파수 출력 허용 범위였다. IoT에 사용되는 900MHz 대역은 우수한 전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무선통신과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근거리 통신으로만 제약하고 있었다. 당연히 근거리 출력 또한 10mW로 낮게 제한하고 있었다. 현행 주파수 출력 기준이라면 sk텔레콤은 전국적으로 약 4만~5만개의 중계기 설치가 필요해 구축비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소매 걷은 정부, 900MHz 출력기준 대폭 상향**

IoT 상용화에 기업들이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주파수 출력 규제를 완화했다. 900MHz 대역 출력 기준을 기존 10mW에서 최대 200mW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중계기 설치에 대한 구축비 증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IoT 전용망 구축 시 기존 10mW 출력으로 100개의 기지국이 필요했다면, 이제 출력이 높아져 27개 기지국만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약 70%의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규제완화로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전국 전용망 구축’이라는 타이틀이 생겼고, 무엇보다 수출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9월부터 ‘IoT 전용 요금제’를 인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할 때와 달리 신속하게 새로운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위치 기반서비스 사업자 역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다양한 IoT서비스의 활발한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b>이렇게 달라졌어요!</b> <span style="float: right;">미래창조과학부 ☎ 02-2110-1983</span>	
<p><b>개선 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물인터넷용으로 사용되는 주파수의 출력 기준이 낮아 전용 네트워크 구축 애로</li> </ul>	<p><b>개선 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력 기준 완화(10→200mW)로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 비용 · 시간 절감 및 민간 투자 촉진 - 「무선설비규칙 고시」 개정(2016년 5월)</li> </ul>

---

발 행 처 | 국무조정실 · 문화체육관광부

발 행 일 | 2016. 12. 31

제 작 협 력 | 트라이앵글

인 쇄 제 본 | 상림문화(주)

---